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뜨는 대한민국!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지방시대 선포식 행사 종료 시부터  
(9. 14.(목) 추후 공지)

##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로 달 올린다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

- ① 기회발전특구,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
- ② 교육자유특구,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 일대 혁신
- ③ 도심융합특구,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板)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 ④ 문화특구,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지역 콘텐츠 상표(브랜드) 육성
- ⑤ '균형발전, 지방분권' 목표... 살기 좋은 지방시대 활짝 연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9월 14일(목) 15:3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 【 지방시대 전략과 가치 】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 [참고 1](#))

- \* 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 이는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하여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다.

## 【 지방시대 9대 정책 】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참고 1)

- \* 1)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2)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 3)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 4)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5)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 6)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 7)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 8)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 9)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 1. 기회발전특구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할 수 있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유인책(인센티브)의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인책(인센티브)이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유인책(인센티브) 제도(☞참고 2, Q&A. 1-2)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 2. 교육자유특구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인재가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키고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추진방향(☞참고 2, Q&A. 2-1~3)은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 지방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다.

\* 서울에 가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 여건과 문화 기반(인프라)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중앙과 지방이 지원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오는 9월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에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며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교육자유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다진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연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역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 3.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사업(프로젝트)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되었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케이티엑스(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 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우선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형(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 선도사업지 현황

지역	위치	추진전략(예시)
대구	구(舊)경북도청-삼성캠퍼스- 경북대 일원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 육성, 지원 프로그램
광주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	인공지능(AI), 자동차 특화산업 육성, 문화시설 등 확충
대전	구(舊)충남도청, 케이티엑스(KTX)대전역 일원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 명품 대표 건물(랜드마크) 구축
부산	센텀2 도심첨단산단 일원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특화육성
울산	울산케이티엑스(KTX)역- 테크노파크 일원	친환경 에너지 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 4.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로컬 창업·콘텐츠 생태계

앞으로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상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 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지역(로컬) 콘텐츠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 예술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색있는 지역(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휴가지 원격근무(위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형(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생각(아이디어)을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변 소상공인과 협업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켜 골목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화 등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5. 지방 디지털 혁신성장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소프트웨어(SW)중심 대학을 확대(2022년 44개 → 2027년 100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소프트웨어(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 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를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에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한편,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9대 정책의 이행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 【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 】

9월 14일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에서는 지방시대위원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이 참여해 지방시대의 핵심 주제\*를 논의했다.

- \* ① 기회발전특구 통한 일자리 창출, ② 교육자유특구 및 지방대학 육성,
- ③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④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 ⑤ 지방의 디지털 혁신성장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과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 인재 양성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 자유특구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살면서 일하고 싶은 농어촌과 지방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등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와 교통·문화·의료 등의 생활 기반(인프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해 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한 조(원팀)로 연대해 ‘어디에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담당 부서 <총괄>	지방전략국 총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고상미	(044-251-3105)	
		담당자	서기관	고현웅	(044-251-3106)	
		담당자	사무관	박이용	(044-251-3152)	
		지방산업정책과(기회발전특구)	책임자	과 장	김휘강	(044-251-3126)
		교육문화혁신과(교육자유특구)	책임자	과 장	김주연	(044-251-3133)
		지역공간정책과(도심융합특구)	책임자	과 장	권미정	(044-251-3165)
		분권정책과(지방분권)	책임자	과 장	허영지	(044-251-3145)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15-4570)	
		담당자	사무관	황철환	(044-215-4572)	
		담당자	사무관	김동연	(044-215-4573)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교육자유특구)	책임자	과 장	최수진	(044-203-6340)	
		담당자	사무관	김영현	(044-203-6354)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지역-대학동반성장)	책임자	과 장	윤소영	(044-203-6232)	
		담당자	사무관	조의정	(044-203-6233)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상진	(044-205-3301)	
		담당자	사무관	김보석	(044-205-3306)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형석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조총래	(044-205-3522)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기영	(044-205-3931)	
		담당자	사무관	김길수	(044-205-3932)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선영	(044-203-2611)	
		담당자	사무관	지나은	(044-203-263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송주호	(044-203-4410)	
		담당자	서기관	강은구	(044-203-445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기회발전특구)	책임자	과 장	박성진	(044-203-4420)	
		담당자	사무관	최선희	(044-203-4405)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의식	(044-201-3646)	
		담당자	사무관	이경민	(044-201-4950)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도심융합특구)	책임자	과 장	박정수	(044-201-3684)	
		담당자	사무관	신동하	(044-201-473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204-7290)	
		담당자	사무관	이청수	(044-204-7854)	



## 지방시대 전략과 가치

비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5대 전략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4대 가치

자율

공정

연대

희망

## 지방시대 9대 정책

### 01 기회발전특구 지정 : 양질의 신규 일자리

-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기회특구
- 규제특례, 국제감면 등 파격적 인센티브
-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시 협력 모색

### 02 교육자유특구 도입 : 지역-대학 동반성장

- 지방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 글로벌대학 육성으로 담대한 지역혁신 지원

### 03 지방정부 주도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 지방 도심에 일자리·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개발

### 04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역 정체성 담은 로컬 콘텐츠·브랜드 발굴 및 육성

### 05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및 산업단지 제도 혁신

### 06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핵심인재 양성, 강소기업 육성

### 07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 청년 농어업인 육성, <sup>(가)</sup>농어촌 체험주택 및 지역활력타운 조성

### 08 킬러규제 일괄해소로 투자 활성화

- 현장중심 규제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09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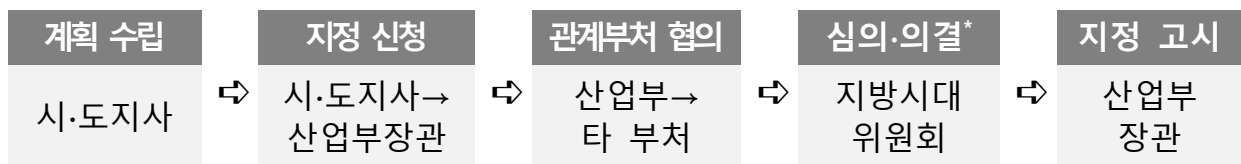
- 중앙 권한·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
- 지역특성 고려한 자치모델 개발
-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및 역량 제고

기회발전특구

Q1-1. 기회발전특구와 기존 특구의 차이점?

- 기업의 지방이전 및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 규제, 재정, 정주 여건 등 **파격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총체적으로 지원**
  - \* 투자 자원 마련-투자 이행-경영 활동 등 기업 운영의 쏠 단계 및 특구 근로자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을 포함
-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과거에 보기 드문 세제 혜택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 도입
  - \*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칙적 특례 부여(특례 불허시 소관 부처가 사유 소명)
-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②분권형 특구를 조성하여 ③능동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됨
  - 지방정부가 특구의 유치 산업·업종, 입지, 개수\*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기업 유치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구성
    - \* 시도별 특구 상한면적(예 :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 개수 제한없이 분할 가능
  - 중앙정부는 특구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능동적으로 특구를 조성·운영**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



\* 고려사항 : 기업 수요·인프라·정주 환경 확보 가능성, 경제성, 발전가능성 등

## Q1-2. 기회발전특구의 파격적 인센티브란?

-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를 포함하여 5가지 이상의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함
  -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
  - 특구기업에게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
    - \* 특구 이전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 기회발전특구 펀드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금융 및 재정 지원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특구기업·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펀드에 일정기간(10년)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9%) 적용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5%p 가산) 지원하고 저리용자 상품을 개발하여 특구기업에 지원
-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외 지방정부가 기업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하는 규제특례제도를 도입
  -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
- 특구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주택양도세 혜택 부여 및 초·중·고 학교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세제 지원	1.~2. 소득·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li> <li>•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li> </ul>
	3.~4. 취득세·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구로 기업 이전(수도권에서 이전 限) 및 특구내 기업 창업 시 지방세 감면</li> <li>* 취득세(100% 감면), 재산세(5년 100% + 5년 50% 감면)</li> <li>** 지방정부의 지방세 감면 자율성 부여 검토</li> </ul>
	5. 개발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부담금 100% 감면</li> </ul>
	6. 상속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li> <li>*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li> </ul>
② 재정 금융 지원	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li> </ul>
	8. 기회발전특구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 기업·인프라 투자 활성화</li> <li>• 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분리과세 9%)</li> </ul>
	9. 저리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li> </ul>
	10.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지원비율 5%p 가산)</li> </ul>
③ 규제 특례	11. 3종 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li> </ul>
	12. 규제특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 위원회 심의·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li> </ul>
④ 정주 여건 개선	13. 주택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li> </ul>
	14. 주택 양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li> </ul>
	15.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등학교 설립지원</li> </ul>

## 교육자유특구

### Q2-1. 교육자유특구란 어떤 정책이고 목적은?

- (가칭)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운영하는 특구
- 정부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도로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

### Q2-2. 교육자유특구 정책이 추진하는 기본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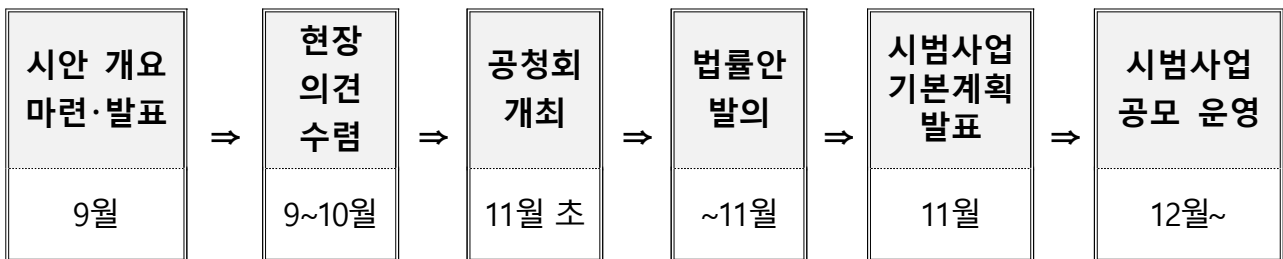
-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 첫째, 지역에서 공교육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우수 지방대에 진학하고, 지역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의 지역정주 생태계 조성
  - 둘째,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공교육 경쟁력 제고
  - 셋째, 특구 내에서는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자유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성·추진하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 분권을 강화

- 넷째,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자유특구 운영 방안에 따라 개선 필요한 규제를 검토하고 특례를 적용하여 규제 합리화 추진

**Q2-3.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어떤 변화를 추진하고 향후 추진 일정은?**

- ① (상향식 지역교육 발전 전략 마련)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
- ② (유아-돌봄) 맞춤형 유아교육 및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로 아이 키우기 더 좋은 환경이 조성
- ③ (초·중·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
- ④ (대학) 지역인재 입학 전형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고등교육 기회의 다변화를 지원
- ⑤ (취업·창업) 지역산업 연계 취업, 지역 정주형 창업 지원을 강화

※ 향후 추진일정





## 도심융합특구

### Q3. 도심융합특구란?

- 도심융합특구는 ❶성장 기반을 갖춘 주요 도시 도심을 대상으로,
    - ❷공간조성(H/W)과 기업지원(S/W)을 융합하고,
    - ❸규제완화, 인센티브를 통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
  - 도시 외곽에 대규모 단지 개발방식이 아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심에 산업·문화·주거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 부처별 개별 사업 추진방식으로부터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을 연계한 종합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 지원효과를 대폭 제고
- \* 「도심융합특구법」에서 기회발전특구 등 다른 사업과 연계 개발 가능한 근거 마련

#### □ 기존 거점조성 사업과 도심융합특구 비교

구분	기존 사업	도심융합특구	
		주요 내용	장점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외곽</li> <li>▶ 쇠퇴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도시 내 중심지</li> <li>▶ 도심 인프라 기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성 우수</li> <li>▶ 도심 인프라 활용 용이</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개발(H/W) 또는</li> <li>▶ 기업지원(S/W)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개발(H/W)</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기업지원(S/W)</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운영·관리체계(O/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개발과 기업지원을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li> </ul>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건축규제 완화</li> <li>▶ 절차간소화 계획 의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신 규제완화 적용</li> <li style="text-align: center;">+</li> <li>▶ 절차간소화 계획 의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수준의 특례 적용</li> </ul>



#### Q4-1.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기준은?

- 지역 주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문화를 누리고, 문화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지정할 계획
  -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경제·사회적 효과 및 가능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가능성, △앵커사업(특성화 사업)의 특화성·매력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할 계획
- 지역주민의 문화 만족도를 높여 수도권에 버금가는 문화 수준 향유

#### Q4-2.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일정 및 지원 계획은?

-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가 진행중(2023.6~11월)이며, 7개 권역별로 11월에서 12월까지 평가를 거쳐 금년 말에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승인할 계획
  - 2024년에는 앵커사업 시범 지원 및 예비사업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2024년 말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할 계획
  -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해 문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계획



### Q4-3. 로컬 창업과 기존 스타트업 육성 정책 간의 차이점은?

- 로컬 창업은 지방의 자원·문화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창업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는 사업
  -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제품·서비스 혁신을 통해 창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으며 지방 기반의 창업기업이 지방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방의 로컬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부처의 사업과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 □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계획

- (지원 내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네트워킹 등 성장 지원
  - (교육·체험) 민간 교육기관·대학 등과 공동으로 콘텐츠 개발역량 교육·현장 체험 강화
  - (성장 단계별 사업화 지원) 창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성장(로컬 크리에이터) → 도약(강한 소상공인)으로 이어지는 성장 체계 구축
  - (자금·협업 지원) 先민간투자 後정책융자 매칭, 동네 크라우드펀딩 등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스케일업 자금을 민관 협업으로 지원

#### ○ 주요 사례

구분	브랜드	브랜드 설명
기업형	 테라로사 (강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기준 매출 400억원, 19개의 직영점 운영</li> <li>○ '02년(설립) 카페 불모지였던 강릉에서 스페셜티로 로스팅한 원두를 핸드드립으로 커피문화 전파</li> </ul>
앵커 스토어	 서피비치 (양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설립, '22년 기준 매출 36억원</li> <li>○ 서피요가, 패들보드 등 레저 프로그램을 개발, 매년 8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양양 명소로 발전</li> </ul>